

“민주주의 만세! 빛의 혁명 만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지난 4일, 전주시 풍매지관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윤석열 파면, 국가 정상화의 시작”

도내 야권, 현재 尹 탄핵 인용에 ‘일제히 환영’
“제4기 민주정부 창출”·“내란세력 완전 청산” 등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도내 야당이 일제히 환영을 표명했다.

▲민주 도당 “제4기 민주정부 창출로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이일택)은 이날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술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탄핵이 만든 당연한 귀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과 관련해 “위헌·불법적인 친위쿠데타의 종식이며, 민주주의와 헌정을 회복하려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북 도민들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

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철야와 단식까지 감행한 전북 도민의 열망이 결국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다”며 “이번에도 전북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위헌과 불법에 침묵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자격이 없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 집단일 뿐”이라며 “다가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자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며 지역 발전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파면을 이끈 전북 도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부 수립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제4기 민주정부 창출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친위쿠데타의 상처를 치유하고 개혁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도당 “내란세력 완전 청산해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이날,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수 도당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판단”이라며 “국민의 헌법이 짓밟히고, 국정이 사유화된 결과가 바로 오늘의 파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번 결정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본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로운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 “사회 개혁의 새 출발점으로”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며, 이를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해 빼앗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연대와 노

력으로 민주주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이번 파면이 단순히 내란세력을 축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정의당은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파면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였던 전북도민들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성명서에서는 파면 광장이 단순한 집회 장소를 넘어 연대, 평화, 나눔, 존중이 함께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의의 세우고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전북도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시장군수 “尹 파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승리”

“4·19 혁명 이후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한 획”

전북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탄핵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내란 수괴가 총칼로써 말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끝내 지켜냈고, 4·19 혁명 이후 수십 년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12·3 내란 사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 친위 쿠데타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서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법치와 자유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의에 맞서는 분노와 민주적 가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보았

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굳건함을 목격했다”면서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과 비상계엄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장군수들은 별도로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입장문을 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완주군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적토성산(積土成山)의 자세로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완주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뒤를 이어 시민항쟁의 위대한 대열에 섰던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저항정신을 이어온 부안군민과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다시 세우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여명이 지난 4일 윤석열 파면과 관련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명 의원 명의의 도의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 “尹 파면, 국민의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

“내란행위 가담자 철저한 조사·엄중한 처벌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탄핵은 국민의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도의원 20여명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명 전체 의원 명의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현재의 결정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에 대한 법치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시민항쟁에 나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12·3 내란은 극단적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은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현재 결정은 민심이 곧 천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내란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종결로 대한민국은 새 희망의 출발선에 섰지만, 내란으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가 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며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민과 익산시민의 위대한 승리”

최정호 민주 중앙정책위 부의장,尹 파면 관련



최정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의 8인 만장일치 탄핵 판결을 보고 ‘국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특히 익산시 낭산면이 고향인 최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고 그동안 마음을 졸여온 국민과 익산 시민들의 고통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가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서울 광화문과 익산 시내 곳곳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애국시민들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

주주의를 지켜낸 민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이와 함께 최 부의장은 이날의 승리는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고 평가하고 “국민과 익산 시민이 함께 걸어온 오늘까지의 험난한 여정은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익산 시민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과 익산 시민들이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최 부의장은 지난날 익산역 앞에 천막을 치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며 1주일 간 단식을 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건강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윤석열 탄핵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7~10일 IOC 방문”

7~11일까지 주요 일정 발표… 하이퍼튜브 정책토론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11일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일정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지사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8일 오후 2시에는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IOC 관계자와 면담할 계획



기관 지역인재 공동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전 공공기관 등 총

이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행사도 열린다. 오는 9일에는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전

23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인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이퍼튜브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국회의원 송세준·이춘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스튜디오 갈릴레이 김현명 대표가 ‘하이퍼튜브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창영 실장이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하이퍼튜브 기술 개요 및 국내의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 튜브를 활용한 초고속 열차 기술로, 정부는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 첨단 교통 인프라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열린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주요 현안을 도민들과 공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야당, ‘계엄 저지 감사문’ 국회 본회의서 의결

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회부… “청문회 등 거친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졸탄핵’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마무리 되면서 정국을 살리기 위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지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했다.

이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법사위에 회부한 후 청문회, 조사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

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